

이번 주 도내 109억원 규모 시설공사 발주

이번 주 도내에서 109억원 규모의 시설공사가 발주된다.

조달청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도내 시설공사는 총 8건 109억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세부내역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의 영월~방림(1) 도로건설 전기공사(59억2,500만원)·소방공사(23억7,500만원)·통신공사(4억

300만원)와 춘천교대의 미술관 신축 전기공사(2억9,500만원)·기계설비공사(2억2,900만원)·통신공사(8,700만원) 등이다. 또 도교육청 영월 교육지원청의 상동중·고 다목적실 신축공사(9억5,300만원)와 철원교육지원청의 김화지구 벽지학교 통합관사 신축공사(6억6,200만원)도 발주된다. 하위윤기자 faw4939@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개발 가속화

부지매입안 도의회 통과

도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EFEZ) 옥계지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2일 옥계지구를 직접 개발하기 위한 부지매입안도 의회를 통과하면서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개발사업자로 도가 전면에서 나서면서 당초 계획대로 부지 조성하고 함께 기업 유치 작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안으로 편입 토지 보상협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역시 연말까지 승인 완료하고 2018년 착공해 2020년 상반기까지 조성공사

를 완료할 계획이다. 옥계지구 보상 협의와 관련, 현재 주민들의 약 77%가 동의해 비교적 순조롭게 토지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15일 옥계면사무소에서 편입토지 보상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고 개발사업과 토지 보상 절차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첨단소재 융·복합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옥계지구는 현재까지 (주)서원, 중국Y그룹 및 국책사업인 연안방재센터 유치를 협의 중에 있다.

아울러 옥계지구의 본격 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북평지구, 망상지구의 기업 유치 및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현기자 sunny@kwnews.co.kr

조달청, 109억원대 도 시설공사 입찰 진행

15일 8건 지역 제한·의무 진행

조달청(청장 정양호)이 15일 109억원대 강원도내 시설공사 입찰을 진행했다. 이번 도내 입찰은 모두 8건의 시설공사로 지역제한과 지역의무로 진행되며 모두 적격심사를 거친다.

입찰내역은 강원도교육청 산하 신축공사 2건, 국토교통부 원주국토관리청

의 영월-방림 도로건설공사 3건, 춘천교대 미술관 신축공사 3건이다. 도 교육청 소관 신축공사 입찰내역은 영월교육지원청의 상동중고다목적실 신축공사(추정가액 9억5300만원), 철원교육지원청의 김화지구 벽지학교 통합관사 신축공사(추정가액 6억6200만원)다. 국토교통부 원주국토관리청의 영월-방림 도로건설 입찰은 소방(추정가액 23억7500만원), 통신(추정가액 4억300만원), 전기(59억2500만원) 공사로 각각 구분된다. 춘천교대 미술관 신축공사도 통신(8700만원), 기계설비(2억2900만원), 전기(2억9500만원)로 나눠 입찰이 진행될 계획이다. 신관호

아하! 그렇구나

하도급업체와의 약정에 의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면하는지 여부

Q

하도급업체에서 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업주와 하도급업체 간에 모든 사고의 책임은 하도급업체가 지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사업주는 안전조치 의무를 면제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A

원고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건설용 리프트 설치 및 해제 작업에 관하여 하도급업체에 하도급을 주었는데, 하도급업체 소속 직원들이 위 작업을 하던 중 고정되지 않은 마스트와 함께 13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경상남도 지사는 원고가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원고와 하도급업체 간에 모든 사고의 책임은 하도급업체가 지는 것으로 약정을 하였는바 약정에 따라 원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면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

는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와 위 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구체화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의무는 작업현장에서 재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구현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위 규정들은 모두 강행규정들이다(창원지방법원 2016구합 52642)”라고 판시하여 하도급업체와 모든 사고의 책임은 하도급업체에 있다고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여름철 공사현장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는바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하도급하였다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산업재해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소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동원
법무법인 이강 변호사

